

# 초고령 사회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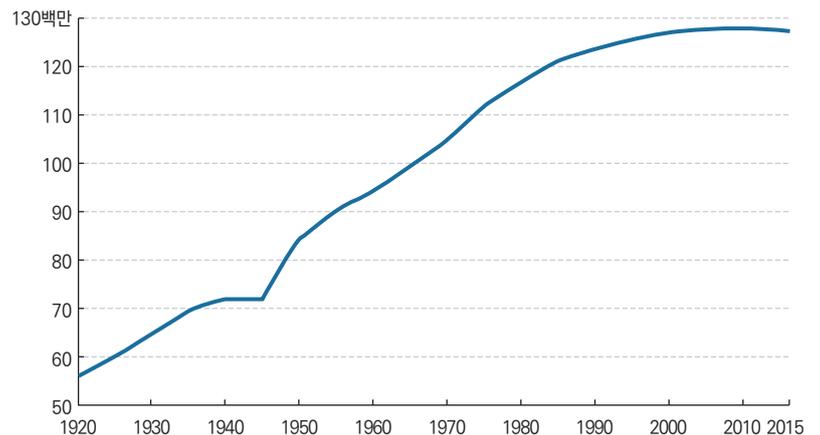
## 일본노년학회의 제안

올해 초 일본노년학회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의 노년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에서는 유엔 자료를 근거로 지난 50년간 65세 이상을 노년으로 정의해 왔다. 이를 75세 이상으로 바꾸고 65~74세는 준노년(semi-elderly)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의사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일본노년학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및 습관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게 된 일본인의 건강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노년에 대한 정의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일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수한 의료적 판단에 근거한 일본노년학회의 제안은 앞으로 일본의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2015년 일본 인구조사

20세기 들어 3배 정도 증가한 일본 인구는 2010년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인구조사가 최초로 시작된 1920년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2015년 일본 인구는 1억 2,710만 명으로 5년 전보다 0.7% 줄었다(그림 1).

그림 1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 인구



출처: 일본 총무성

총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일본 전체 인구의 26.7%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보다 3.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0년 36%, 2060년 40%에 육박할 것이며, 이때는 일본인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2).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로 인구는 감소하는데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어 2040년엔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36%를 차지하고 근로인구는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21%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초 일본 노년학회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의 노년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순수한 의료적 판단에 근거한 일본노년학회의 제안은 앞으로 일본의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출처: e-Stat (일본 정부통계포털)

가구 규모 역시 계속 줄어들어 1995년 2.82명이었던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2015년엔 2.39명이 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전체 5,188만 일본 가구의 32.5%를 차지하게 됐다.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남자 8명 중 1명과 여자 5명 중 1명은 홀로 산다. 반면 169만여 명의 노인은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데 이는 2012년 인구조사 후 약 40% 증가한 것이다.

15세 이상 일본인 59.8%는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이는 5년 전보다 1.4%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이를 성별로 분류해 보면 15세 이상 남성의 70.8%(5년 전보다 3% 포인트 감소), 여성의 49.8%(5년 전보다 0.2% 포인트 증가)가 일을 하고 있다. 1950년 인구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이래 25~29세 여성 고용률이 80%를 넘어선 적이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중 80.9%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종사자 비율에서 눈에겨 볼 만한 결과는 의료 및 복지 분야 종사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 2012년 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해 2% 포인트 상승한 12.2%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도·소매상 16.5%, 제조업 15.7%).

일본의 근로인구는 1990년대 말 6,700만 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그 후 지금까지 약 200만 명이 줄었다.

노동시장의 현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해 근로인구는 4,900만 명으로 줄어들어 필요한 노동력보다 21%가 부족하게 된다.

### 줄어드는 일본의 근로인구

그간의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크게 오르지 않아 15~64세 근로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인구 10명이 은퇴 인구 1명을 부양했으나 오늘날엔 근로인구 2.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근로인구는 1990년대 말 6,700만 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그 후 지금까지 약 200만 명이 줄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고령화로 21세기 중반에는 근로인구가 4,200만 명으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20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은 여전히 노동시장을 이민자에게 개방하는 대신 일할 능력이 있는 자국민을 더 활용하려 하고 있다.

### 노동력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경제가 연간 1%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이 성장률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의연간 1.2% 증가한다면 이러한 경제 확대에 따라 2040년에는 6,20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의 현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해 근로인구는 4,900만 명으로 줄어들어 필요한 노동력보다 21%가 부족하게 된다.

### 위미노믹스와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력 확보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재임 초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을 일컫는 “위미노믹스(Womenomics)”를 통해 일본 총생산을 15% 올릴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일본 경제 회생에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견해를 감안할 때 여성 노동력 활용은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2009년 일본의 여성 고용률은 60%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았다. 일본 여성의 70%는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직장을 그만뒀다. 여성 대학 졸업자 중 65%만 졸업 후 노동시장에 참여했다. 이에 대응해 아베 행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전문성 개발을 목표로 보육시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했으며, 무엇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국가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2009년 60%였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16년 66.7%까지 상승해 위미노믹스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일 대부분이 시간제나 저임금이고 직장에서의 성 격차도 지속되고 있어 위미노믹스만으로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에 버거워 보인다. 따라서 일본이 목표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베 정부가 노동이민전략을 노동정책에 포함해야 하며, 노동이민전략은 위미노믹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표면적으로는 이민 확대를 거절하고 있지만 “닫힌 앞문, 열린 뒷문”으로 불리는 정책을 통해 조금씩 노동 이민을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 정보기술 근로자 수를 두 배 늘리겠다는 목표(2020년까지 6만 명)를 세웠고 일본 대학과 기술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의 고용이 확대됐다.

위미노믹스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를 확대하고 흔히 여성이 지게 되는 아동과 노인 보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의 이민 개혁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건설 수요가 늘면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일본의 많은 지역사회는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국가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거의 61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20%)이 일을 한다. 일본 내무부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66%는 65세 이상이 돼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의 근로인구가 늙어 가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점점 더 많은 노인이 택시를 운전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일하거나 은행 경비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60세 이상인 사람에게게만 임시직을 알선하는 고리이사사(社)의 겐 오가타 회장은 사람들이 일을 더 오래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일본은 근로자를 수입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을 노인이나 여성, 로봇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인 매킨지앤드컴퍼니는 노인들이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제안했다. 첫째, 근무 형태를 다양화한다. 일본 식품회사 가고메와 백화점 운영사 다카시마야는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업무 성과에 따라 전일제나 시간제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준다. 두 회사 모두 노인의 업무 수준과 급여를 그들의 성과와 연계하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 없이 고용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복지 부문 일자리로 노인 인력을 유인한다. 일본 후생성은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부문이 복지라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이 부문에는 17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전체 노동력 부족의 20%). 현재 요양보호사 180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정부는 2025년이 되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수가 7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돼(오늘날 550만 명) 요양보호사 250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수요를 어느 정도 메울 수는 있으나 완전히 충족하기는 어렵다.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은 여러 면에서 매력 있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가 2013년 수행한 조사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의 11%는 이런 종류의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실업 중인 65~74세 노인이 일주일마다 며칠만 요양보호사로 일해도 일본은 2025년까지 70만 명의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요양보호 일에 종사했던 노인에게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노인들을 요양보호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목표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베 정부가 노동이민 전략을 노동정책에 포함해야 하며, 노동이민전략은 위미노믹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입장이다.

일본 내무부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66%는 65세 이상이 돼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셋째,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식·기술 공유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노인들이 젊은 직원들과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주로 노인들로 구성된 일본 미쓰이사의 직원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경험과 역할을 활용해 65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수익 앤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다룬다. 일본 인력회사 마이스타 60(Mystar 60)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세 이상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OECD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실질 은퇴 연령은 70세에 가깝다.

**노년에 대한 재정의**

일본노년학회의 제안대로 노인을 7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면 오늘날 전체 인구의 26.7%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는 약 13%로 줄어든다. 지난해 일본 자민당은 사회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년에 대한 정의를 재고하고 기업의 정년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노년을 65세로 정의하는 것은 실제 인식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생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는 노년이 70세부터 시작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6%는 75세부터, 20%는 65세부터 시작된다고 답했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인의 건강기대수명은 남성 71.2세, 여성 74.2세로 조사됐다. 또 다른 조사에서 65~69세 응답자의 87%와 70~74세 응답자의 82%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될 만한 건강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노년을 재정적하자고 제안한 학자들은 의료기술과 생활환경의 발전으로 일본인의 신체적, 지적 능력이 10년 전에 비해 5년에서 10년은 더 젊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기대수명 증가와 같은 발전이 긍정적인 발전으로 환영받기 위해서는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정년 폐지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노년을 맞은 노인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도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실질 은퇴 연령은 70세에 가깝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대개 은퇴하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이 61세부터 지급되는(2025년 까지 65세로 오를 예정)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출처**

- "As Japan ages, so too does its workforce", The Economist, Jan 7, 2017.
- "Proposal to raise threshold of 'elderly' to 75", NHK World. [http://www3.nhk.or.jp/nhkworld/en/news/20170105\\_25/](http://www3.nhk.or.jp/nhkworld/en/news/20170105_25/) 에서 2017. 1. 16. 인출.
- "Japan census report shows surge in elderly population, many living alone", The Japan Times, Jun 29, 2016.
- "Japanese people are living so long that the country's definition of 'elderly' could change", Business Insider, Jan 12, 2017.
- "Boosting Japan's Workforce (and Womenomics) through Immigratio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Dec 15, 2016.
- "Japan: Lessons from a hyperaging society", McKinsey&Company, March 2015.
- "Redefining the 'elderly' age", The Japan Times, Jan 10, 2017.